

국가알코올정책에 대한 인식연구

천성수*, 윤선미, Michael Welch, Easton Reid, Rubelyn Inot**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

알코올연구자, 보건정책연구자, 입법관련전문가, 관련 NGO단체 전문가 30명을 선정하고,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후 전자메일을 보내 일정기간 내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알코올 통제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의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은 알코올 소비 감소효과 48.4%, 다음으로 제도의 적절성 35.5%를 꼽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문항은 제도의 적절성 71%, 알코올 소비 감소효과 64.5%, 국민자유선택권 29.1%, 정책수립 용이성 19.3%, 경제적 요소와 국제무역관계는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통제 정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응답으로 판매시간 제한(5.61), 주류가격 인상(5.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공장소 음주제한(5.46), 음주운전단속(5.46), 건강증진부담금 부과(5.29) 주류광고규제(5.18)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클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절주교육사업(4.93), 절주홍보사업(4.82), 유흥업소 규제 및 단속강화(4.61), 술 없는 이벤트나 활동지원(4.57) 지역사회 감시활동(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통제 정책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응답으로 주류의 가격인상(5.46), 판매시간 제한(5.11), 건강증진부담금 부과(5.07), 공공장소 음주제한(4.86), 유흥업소 규제 및 단속강화(4.61)와 같이 가격이나 판매에 제한을 주는 정책이 저항이 클 것으로 응답하였다. 저항성이 가장 낮은 정책은 절주교육사업(2.18), 절주홍보사업(2.21)였다.

알코올 통제 정책에 대한 찬성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에 보통(4점) 이상으로 응답을 하여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공장소 음주제한(6.43)으로 가장 높은 찬성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음주운전단속(6.36), 절주교육사업(6.32), 판매시간 제한(6.21), 절주홍보사업(6.14), 주류광고규제(6.0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찬성비율이 가장 낮은 정책은 지역사회 감시활동(5.21), 유흥업소 규제 및 단속 강화(5.29), 술 없는 이벤트나 활동에 지원(5.54), 주류의 가격인상(5.64)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점제도와 업소판매점 제도에 대한 예방효과는 각각 5.87, 5.42, 찬반 정도는

6.32, 5.97, 저항성 예상정도는 5.53, 6.03으로 응답하여 소매판매점 보다는 업소판매점 제도 도입의 예방효과나 찬성비율이 낮고, 저항성을 클 것으로 응답하여 소매판매점 제도 도입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류판매점 제도 도입에 대한 최소화 방법으로 국민의식 개선 6.42, 국회의원 설득 5.84, NGO 등의 정책 홍보 활동 5.67, 단계적 도입 5.53, 주류회사 설득 4.9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알코올통제정책 수립 시 중요성에 대하여 연구 TF팀 설치 6.03, 범국민적 위원회 설치 5.52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